



21세기 국민 환경의식조사(2)

자료제공 환경부

주요조사결과

PART II. 환경보전운동의 실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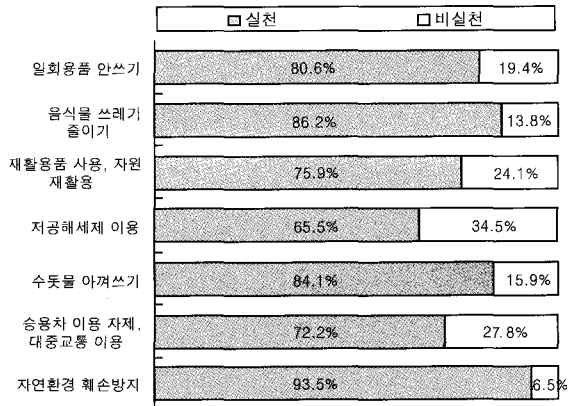
1. 환경보전 활동의 실천정도

□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자연환경 훼손방지'(93.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86.2%), '수돗물 아껴쓰기'(84.1%), '일회용품 안쓰기'(80.6%) 등에 대한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보전 활동 중 기본적인 '자연환경 훼손'이나 실질적인 가계부담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에 대한 실천 정도는 매우 높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저공해제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됨. [옆 도표 참조]

2. 환경오염 사례의 신고 경험, 신고처 그리고 사후 통보 여부

□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신고 경험'은 45%로 나타남.



□ 환경오염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67명을 대상으로 신고처를 알아본 결과, '지방자치단체'(68.7%)가 1순위로 나타남. 또한 사후처리를 '통보 받았다'(41.8%)는 의견보다 '통보 못 받았다'(58.2%)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결과통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요망됨.

□ 향후 환경오염 행위 목격시 신고 여부에 대해서 '신고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77.7%,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22.3%로 조사되어,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확인되고 있음.



□ 향후 환경오염 행위 목격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334명을 대상으로 '신고기피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회분위기를 삭막하게 하기 때문에'(26.3%)라는 응답과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번거로워서'(24.0%)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신고처를 몰라서' 신고를 못한다는 의견은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환경부의 적극적 홍보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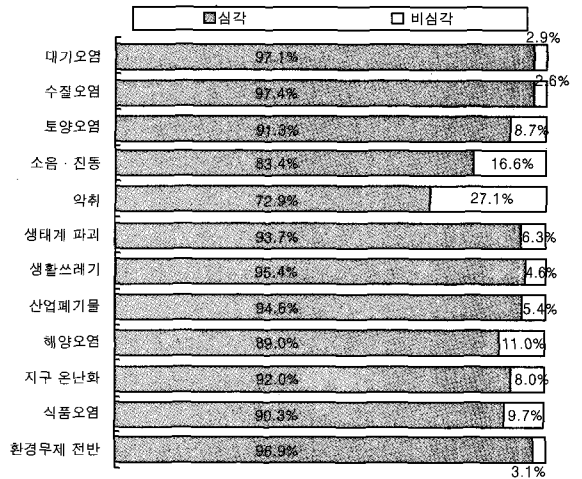
■ 향후 신고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통보, 포상금 확대 등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망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요망됨.

PART III. 환경오염 실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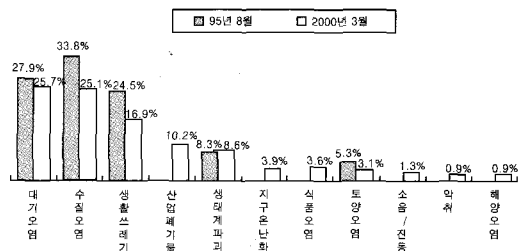
1. 분야별 환경오염 실태 평가

□ 주요 환경문제 관련 분야에 대한 심각성을 살펴보면, '수질오염'(97.4%)과 '대기오염'(97.1%) 문제를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96.9%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처리'(95.4%), '산업폐기물 및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94.6%), '생태계 파괴'(93.7%) 순으로 높게 조사됨.

■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오염 관련 평가 분야의 심각성에 대한 과거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문제 전반'과 '생활쓰레기 처리', '산업폐기물 및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환경문제 중 정부의 우선적 해결 분야

□ 환경문제 중 정부의 우선적 해결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대기오염(25.7%)과 수질오염(25.1%)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문제(16.9%), 산업폐기물 문제



국민환경의식조사

(10.2%), 생태계 파괴문제(8.6%) 등으로 나타남.

□ 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활쓰레기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추진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요망됨.

PART IV. 환경정책 일반에 대한 평가

1. 국가정책 중 환경분야의 우선순위

□ 국가 정책에 대한 중요도(1순위 기준)를 살펴보면, '경제정책'(32.0%)과 '환경정책'(26.7%)이 他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교육정책(11.9%), 건설·교통정책(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복응답결과를 종합하면, 환경정책(60.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정책(53.0%), 교육정책(25.7%), 건설·교통정책(2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으로 조사되었으나, 중복응답결과를 종합하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2. 환경문제 해결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질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환경전문가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배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해야 한다'(60.4%)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국 일반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환경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여 주목됨.

3.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의견 평가

□ 환경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73.7%로 나타나 '지역개발'보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중시형 시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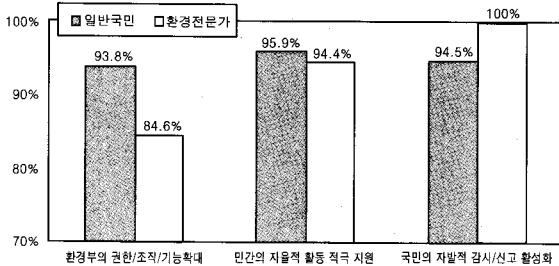
① "환경부 조직, 권한, 기능 확대"에 대해, 일반국민(93.8%)과 환경전문가(84.1%) 모두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냄.

②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의 자율적 활동 지원"에 대해, 일반국민의 95.9%, 환경전문가들의 9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국민의 자발적 감시와 신고를 활성화"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94.5%)과 환경전문가(100%) 모두 '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PART V. 환경분야별 정책 평가

1. 대도시 공기오염 문제 중 우선 해결과제

□ 대도시 공기오염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52.7%)가 '먼지·매연'을 지적함. 그 다음으로 '오존 등 광화학 스모그'(28.8%), '산성비'(9.2%), '지하공간내 공기오염'(5.9%), '악취'(3.4%)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대도시의 공기오염 분야에서는 먼지와 자동차 매연문제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서울(30.7%), 인천/경기(30.6%), 대전/충청(41.1%)에서는 '오존 등 광화학 스모그'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

2.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은 49.9%,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50.1%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소유자(1,113명) 역시, 찬성

(50.1%)과 반대(49.9%)가 엇갈리고 있음. 단, 경유 이용율이 높은 농촌지역지역(61.7%)과 경유차량 소유자(68.8%)는 적극적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나 주목됨.

- ☞ 휘발유차량 소유자 (826명) 찬성(53.8%) > 반대(46.2%)
- ☞ 경유차량 소유자 (231명) 찬성(31.2%) < 반대(68.8%)
- ☞ LPG차량 소유자 (106명) 찬성(55.7%) > 반대(44.3%)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유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들(748명)이 제시하는 적정 인상폭은 평균 69.7%로 나타남.

3. 식수 음용 실태

□ 식수 음용 실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59.1%) 이상은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 '약수물 이용'(13.9%),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심'(13.7%), '생수를 사서 마심'(5.0%) 순으로 나타남.

□ 95년 8월 조사와 96년 1월 조사, 97년 9월 조사,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비율이 1순위로 조사됨. 그러나 약수물을 음용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며, 정수기를 통해 정수하여 음용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 가정용 정수기를 이용한 정수처리 수돗물 음용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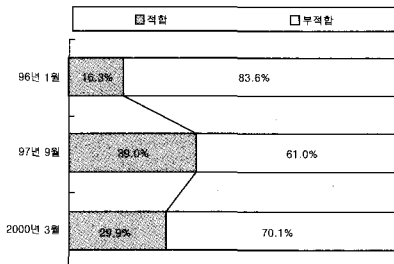
[표 참조]



| 식수 음용 형태 | 응답률 | | | |
|--------------------|----------|--------|--------|--------|
| | 2000년 3월 | 97년 9월 | 96년 1월 | 95년 8월 |
| •수돗물을 끓여서 마심 | 59.1% | 58.8% | 61.5% | 47.9% |
| •산에서 약수물을 떠와서 마심 | 13.9% | 15.3% | 15.5% | 23.3% |
|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하여 마심 | 13.7% | 10.1% | 7.0% | 5.4% |
| •먹는 샘물(생수)을 사서 마심 | 5.0% | 5.9% | 5.1% | 10.7% |
| •우물, 샘물 등을 이용 | 4.2% | 4.7% | 4.2% | 9.8% |
| •수돗물을 끓여 마심 | 2.5% | 4.6% | 4.0% | 2.8% |
| •약수를 끓여 마심 | 1.4% | - | - | - |
| •약수물을 정수 후에 마심 | 0.2% | - | - | - |
| •지하수 | - | - | 2.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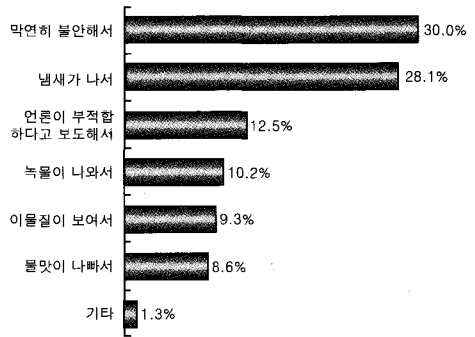
4. 수돗물의 식수이용 적합성

- 수돗물의 식수이용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다'는 긍정적 의견은 29.9%인 반면,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의견은 과반수가 넘는 70.1%로 조사됨.
- 과거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수돗물의 식수이용 적합성에 대해 '적합하다'는 긍정적 의견은 96년 16.3%에서 97년 39.0%로 증가하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29.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식수적합성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29.9%)는 지난 96년 조사결과(16.3%) 보다는 약 14%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식수에 대한 평가가 다소 개선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됨.



5. 수돗물의 식수 부적합 이유

-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1,052명을 기준으로 부적합 이유를 질문한 결과, '막연히 불안해서'(30.0%)라는 의견과 '냄새가 나서'(28.1%)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언론의 부적합 보도'(12.5%), '녹물이 나와서'(10.2%)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수돗물의 식수 부적합 원인은 구체적인 부적합 요인(냄새)과 아울러 사회적 불안심리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정수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이 요망됨.



< Base = 1,052 >

6. 수돗물의 對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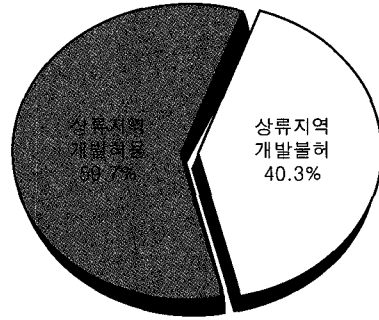
- 수돗물의 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해결과제로는 '수돗물 정수 및 검사결과 완전 공개'(36.1%)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환경전문가 그룹의 경우, 수돗물의 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해결과제로는 '상수원 이전 및 오염방지 시설완비'(29.3%)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간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 환경전문가들은 '상수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인들은 '수돗물 정수과정 및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방안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Base = 1,500 >

| 항 목 | 2000년 3월 | 97년 9월 | 96년 1월 |
|---------------------------|----------|--------|--------|
| | 응답률 | 응답률 | 응답률 |
| • 수돗물 정수, 검사결과 완전 공개 | 36.1% | 19.3% | 18.3% |
| • 급배수 시서 개선* | 20.2% | - | - |
| • 상수원 이전, 오염방지 시설 완비 | 15.0% | 31.7% | 30.1% |
| • 수질검사 항목증설 기준 강화 | 14.9% | 20.5% | 21.8% |
| • 수돗물 정수시설 개선 및 고급화 | 12.9% | 28.2% | 19.8% |
| • 저수조 관리 대폭 강화* | 0.9% | - | - |
| • 생수 판매 억제* | 1.3% | - | - |
| • 신뢰성있는 기관 및 국제기구의 안전성 공인 | - | 10.3% | 9.4% |
| • 무응답 | - | - | 0.5% |

| 응답 | 지역별 | | | | | | |
|---------|-------|--------|--------|--------|--------|--------|-------|
| | 서울 | 부산 /경남 | 대구 /경북 | 인천 /경기 | 광주 /전라 | 대전 /충청 | 강원 |
| 상수개발 허용 | 66.4% | 44.9% | 78.7% | 52.4% | 52.5% | 69.5% | 79.2% |
| 상수개발 불허 | 34.6% | 55.1% | 21.3% | 47.6% | 47.5% | 30.5% | 20.8% |

7. 상수원 관리를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대립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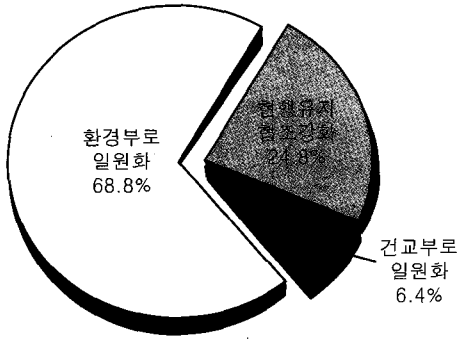
- 상수원 관리를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대립시 해결 방안으로 '하류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처리 시설을 완벽히 갖춘다면 상류지역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상류지역 개발중시형 의견이 59.7%로 조사됨. 반면 '하류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상류지역개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류지역 보전중시형 의견은 40.3%로 나타남.
- '상류지역 개발중시형' 의견은 대구경북(78.7%)과 강원(7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하류지역 보전중시형' 의견은 부산경남(55.1%)에서

8. 향후 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체계

- 향후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 반국민의 과반수 이상(68.8%)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하였으며, '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4.8%로 나타남.
- 환경전문가 그룹 역시 향후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적합하다'(66.5%)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양부처간 협조 강화'를 지적한 의견은 29.9%, '건설교통부로의 일원화'는 3.6%로 각각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물관리'가 환경문제의 핵심사안이



리는 점에서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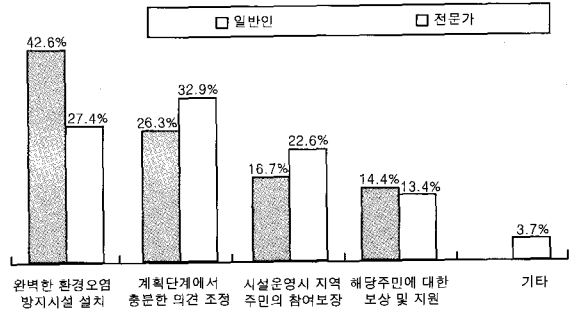
< Base = 1,500 >

9. 쓰레기 처리 시설의 입지선정 문제 해결 방안

□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싼 NIMBY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42.6%)를 지적한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26.3%), '시설운영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16.7%), '해당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14.4%) 순으로 조사됨.

□ 한편 환경전문가들은 '계획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32.9%)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27.4%), '시설운영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22.6%) 순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NIMBY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오염방지시설' 및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10. 재활용제품 구입 빈도 및 구입 회피 이유

□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재활용제품 구입 빈도를 살펴 보면, '구입한다' 59.2%, '구입하지 않는다' 40.8%로 조사되어, 재활용 제품을 구입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활용제품의 활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필요한 물품 중 재활용품이 없어서'(22.9%), '구입처를 몰라서' (21.8%), '제품의 질이 낮아서'(20.1%)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활용품 품목과 구입처 확대와 아울러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11. 현행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 현행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분리 배출을 해도 섞어서 수거해 간다'는 지적이 31.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품목 확대와 아울러 분리·수거방법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요망됨. 또



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이 시급히 요망됨.

1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의견

- 일반국민의 47.9%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고 있는 의견은 52.1%로 나타남.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81.6%)이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반대하는 276명을 대상으로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웃간의 분쟁 소지'를 지적한 의견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따른 이웃간의 분쟁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對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이웃간의 분쟁 발생시 해소 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다음호에 계속...

www.kemf.or.kr

